

빛 눈덩이인데... 에너지공기관 임원 외유성 해외출장 적발

산업부 부적절 출장관행정보 접수 두 기관 A·B임원 다수 비위 적발
코로나 거리두기에도 여행지 누벼 해외지사 관계자에 식사비도 전가
상반기 41곳 임원 출장 점검키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십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에너지 공공기관 두 곳 임원 2명이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엄중하게 시행되던 시기 정부의 출장 자제 지침을 위반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공공기관들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방만 경영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 2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두 기관 A, B 임원에 대한 다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A, B 두 임원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실시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기간 중 여러 차례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차량과 가이 드를 이용, 출장지 인근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두바이 등 유명도시와 베트남 하롱베이 등 다수의 각종 관광지를 다녔다.

또,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을 전가하고,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들이 전가한 식사비 등 전가한 출장경비는 각각 310여만원, 250여만원이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 출장지에서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들과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출장 중 부적절한 비위행위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던 2021년 10월~2022년 4월 중, 2022년 7월~12월 중 이뤄진 것으

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함께 제보를 받은 또 다른 에너지 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관 3곳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2곳은 조사를 마치고 한달 이내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심을 벌인다"며 "나머지 1곳은 4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

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재영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유리 기자

2030 청년들 '휴대폰 깡' 급증 소액 마련하려다 수십배 빚더미

내구제대출 근절 정책 토론회

지난해 대포폰 발행현황 5.5만건
내구제대출 이용하는 청년 증가
불법사금융, 파산등으로 이어져
1인당 개통회선 제한 등 대안 논의

있다"며 "다만 취업이 늦어지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돌려 막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져, 불법사금융,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30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8년말 38.9%에서 2022년 6월말 42%로 확대됐다. 다중채무자 약 2명 가운데 1명이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10명 중 한 명. 자금마련을 위해 내구제 대출을 알아본 응답자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란 의미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후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전화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경험이 적고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청년을 중심으로 내구제 대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피해규모나 처벌을 위한 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27일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포 폰이 주로 이러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찰청 대포폰 발행현황을 보면 2019년 1만9080건에서 2020년 8923건, 지난해에는 5만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대포폰 개통자제가 어려워지면 관련 수법을 활용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구제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대포폰 개통은 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발표한 내구제대출 피해 조사를 살펴보면 내구제대출을 통해 휴대폰을 개설한 대수는 1인당 평균(3년기준) 3.8대로 피해금액은 평균 444만7000원이다.

박 이사장은 "소액을 분할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는 내구제대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저조한 것. 내구제대출의 경우 대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소액자금을 마련하다가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내구제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휴대폰 개통회선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장은 내구제대출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오는 4월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구제대출은 불법사금융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 척결 대상이므로,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내구제 대출을 보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개별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수사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이트나 전화 번호 이용을 금지해 접근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인당 휴대폰이 3회선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개선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더 할수록 더+해지는 더 나은 내일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는 계속됩니다

|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화상창구 서비스 | 생명다양성·환경 보호를 위한 임직원 활동 참여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교육 활동 |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현장 공표

한화손해보험